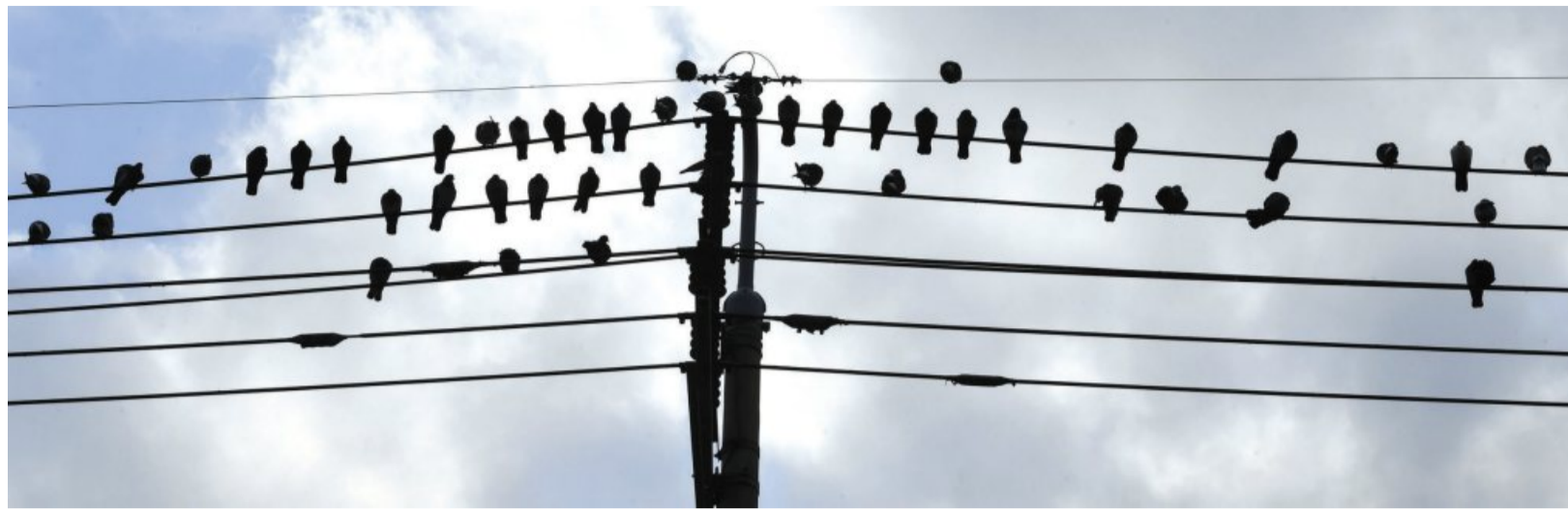


‘애물단지’ 도심 비둘기 어찌나



비둘기 떼가 16일 광주시 남구 사동 광주공원 인근 전깃줄에 모여앉아있다.

/나명주기자mjna@kwangju.co.kr

광주 도심 지난해 1100여마리 서식...유해조류인데 살처분 안돼 자치구 개체수 조절 소극적 “동물단체 등 만족할 해결책 찾는 중”

강호경(여·55·광주시 광산구 장덕동)씨는 최근 베란다 창문을 열었다가 에어컨 실외기에서 ‘구구’ 소리가 들리자 기겁했다. 실외기 상판에는 비둘기 배설물이 잔뜩 떨어져 있었고, 그 밑에는 비둘기가 동지를 틀었는지 나뭇가지를 문쳐 놓은 흔적도 보였다. 강씨는 “울음소리로 시끄럽지만 무엇보다 배설물과 깃털을 치우는 일이 너무 짜증난다”며 “일상 생활에 직접 피해를 주는데 포획하는 것도 맘대로 하면 안 된다니 답답하다”고 말했다.

박모(50)씨는 광주시 동구 충장로를 걸을 때면 절로 눈살이 찌푸려진다고 한다. 거리 곳곳에서 비둘기들이 우르르 몰려다니며 음식물 쓰레기통을 뒤지고, 배설물을 사방으로 흩뿌리고 다닌다는 것이다. 박씨는 “비둘기들이 무엇을 먹고 몸 속에 어떤 병원균을 키워 퍼뜨리고 다니는지도 알 수 없는 것 아니냐”며 “비위생적인 도심 비둘기가 많아도 너무 많은

데, 지자체에서 개체 수 조절에 적극적으로 나서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때 평화의 상징이었던 비둘기가 천덕꾸러기로 전락한 가운데 광주 도심속 비둘기가 늘면서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이 늘고 있다.

12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시 조사 결과 광주 주요 도심에 서식 중인 비둘기는 1170마리 안팎이다. 동구 천변로 일대, 남구 사직공원 등 비둘기들이 자주 모이는 지역에서 파악한 수치로, 지난 2019년 파악한 1000여마리에 비해 수가 늘었다.

하지만 광주시와 5개 자치구는 적극적으로 비둘기 개체 수 조절에 나서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둘기는 분변이나 털 날림으로 문화재 훼손, 건물 부식 등 피해를 일으켜 지난 2009년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됐으나, 그렇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 없이 포획·살처분 하는 것은 불법이다.

각 자치구에서는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운영하고 환경부 지정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하고 있으나, 비둘기는 별도로 포획하지 않고 있다. 관련 법에서 ‘유해야생동물 포획 허가 기준’으로 농·림·수산업에 피해를 주거나 항공기, 전력시설, 분묘 등에 피해를 주는 경우에 한해서만 포획을 허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신 광주시 및 5개 자치구는 조류기피제, ‘버드스파이크’(비둘기가 앉지 못하도록 뾰족한 침이 달린 판) 등을 나눠주는 방식으로 비둘기 피해 신고에 대처하고 있다.

또 먹이주기 금지 캠페인도 진행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비둘기 먹이 주기를 처벌 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터라 계도·권고하는 데 그치는 실정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도심에서 많이 발견되는 터라 피해 민원이 매일같이 빗발치지만 시·구청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조치는 많지 않다”며 “동물단체 등 적극적인 비둘기 개체 수 감량 조치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는 만큼 양 측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해결책을 모색 중이다”고 말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학교 자율권 보장” vs “0교시·야자 부활”

광주교육청-전교조 ‘정규교육과정 외 교육활동 기본계획’ 갈등

광주교육청과 전교조가 ‘정규교육과정 외 교육활동 기본계획’(교육활동 기본계획)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시 교육청이 학교 자율권을 보장하기 위해 이 계획을 폐지할 움직임을 보이자 전교조측은 ‘0교시·야간자율학습 부활을 추진하고 있다’며 법적 대응을 선언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는 16일 성명을 내고 “이정선 교육감이 최근 교육활동 기본계획 수립을 폐지한다는 공문을 학교에 보냈다”며 “이는 조례와 단체협약을 위반하면서까지 일방적으로 폐지를 선언한 것이며 일선 학교는 ‘해도 된다’는 신호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그동안 광주지역은 ‘교육활동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0교시·방과후학교(보충수업)·야

간자율학습 등을 학생에게 강제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며 “광주교육감이 이를 폐지하면서 야간자율학습 등의 부활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임 교육감 재직시절 시교육청은 매 학기를 앞두고 이 계획을 초중고교에 내려보냈으며, 핵심 시행 대상은 고교였다.

이 단체는 “시교육청에 교육활동 기본계획 폐지 입장 철회와 공문 재시행을 수차례 요구했지만 무시하고 있다”며 “학생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인만큼 단협 및 노조법 위반 고소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교육청의 잘못된 행태를 기필코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시 교육청은 전교조가 주장하는 0교시·보충수업·야간자율학습 부활을 추진하는 것에는 선을 그었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청에서 학교 운영과 관련해 모든 사항을 공문으로 내려보내고 강제하는

것은 학교 공동체의 다양하고 자발적인 분위기 조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며 “교육청의 기본 방침은 학교 운영에 간섭하지 않되, 학교 운영주체들이 합리적 방안을 도출하고 민주·자율적으로 운영하라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교육활동 기본계획의 근거가 조례에 명시돼 있고 전교조와 단협 조항에도 들어 있어 전교조측과 협상을 하고 있다”며 “학생의 선택권과 건강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전교조의 취지에 공감하지만 0교시·야간자율학습 부활을 추진하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한편, 광주시 학생 및 학생보호자의 정규교육과정 외 교육활동 선택권 보장에 관한 조례 등에는 학생과 보호자는 정규교육과정 외 교육활동에 대하여 자율적 선택권을 갖는다고 명시돼 있다. 시교육청은 전임 교육감 시절 이를 토대로 교육활동 기본계획 공문을 초중고교에 내려보냈고, 전교조와 단협 항목에도 포함해 시행해 광주지역 고교에서 0교시·방과후학교(보충수업)·야간자율학습은 자취를 감췄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지역민 사랑받던 법관 떠난다

고영구 광주지법원장·최인규 광주고법 수석부장판사 퇴임

지역민의 사랑을 받아 온 고위 법관 두명이 광주지방법원과 광주고등법원을 떠나게 됐다. 광주지방법원과 고등법원에 따르면 고영구(65·연수원 20기·사진 왼쪽) 광주지방법원장과 최인규(59·연수원 23기·오른쪽) 광주고법 수석부장판사가 16일 각각 퇴임식을 갖고 퇴임했다.



32년 법관생활을 마무리한 고 법원장은 “실태처럼 얽혀있는 사건에서 정의와 진실을 찾으려 노력했다”면서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지켜온 사법부 독립을 원수해달라”고 당부했다. 제주출신인 고 법원장은 사회적 약자들을 법원에 초청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길을 안내하고 우크라이나 난민 등이 거주하는 고려인 마을을 방문해 국내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법적 조언을 하는 등 지역 사회와 소통하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최인규 광주고법 수석부장판사도 같은 날 법복을 벗고 제 2의 인생 설계에 나섰다. 해남출신으로 조대부고·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하고 판사로 임용돼 29년동안 광주지법 판사·전주지법 군사지원장·대전고법 부장판사·광주고법 부장판사와 광주고법 수석부장판사를 역임했다.

최 부장판사는 “지역 범주에서 오랫동안 사랑을 받았는데 은혜를 다 갚지 못한 것 같아 송구하다”고 소회를 밝혔다.

최 부장판사는 광주일보와의 인연도 깊다. 1985년 1월 서울대 법대에 합격했지만 가난한 집안 형편 탓에 등록금을 구할 길이 없어 진학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하지만 딱한 사연을 접한 지인들의 제보로 광주일보는 1985년 1월 25일자 신문을 통해 ‘입학금에 애타는 의지의 법학도’란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다. 사연이 소개된 다음날부터 각지에서 성금과 후원이 잇따라 최 부장판사의 집을 뺨한 꿈을 있게 됐다.

지역민의 후원에 답하기 위한 뜻인지 몰라도 최 부장판사는 근로정신대와 5·18 피해자들의 소송부터 전두환 회고록 손해배상까지 지역에 굽적한 사건마다 재판을 맡았다.

최 부장판사는 29년간의 재판 중 2010년 장흥수협과 어민들의 조정을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으로 꼽았다. 적극적인 민사배심 조정을 통해 생계터전이나 어촌계 공동재산인 양식어장을 잃을 위기에 처했던 어민들의 어업권을 되찾아 줬기 때문이다.

최 부장판사는 “사법부 내에 꾸준했던 호남 법조인 명맥이 최근 뜸해졌다”면서 “선배들이 이어온 명맥을 지키지 못해 죄송하지만, 법조계를 떠나지 않고 법원 밖에서도 지역민들에게 받은 사랑을 갚겠다”고 다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전남 지진 안전지역 아니다?

지난해 규모 2.0 이상 2회 등 33회 감지

지난해 광주·전남에서 총 33회의 지진이 감지됐다.

16일 기상청이 발표한 ‘2022 지진연보’에 따르면 지난 한해 동안 광주·전남에서 발생한 총 33회의 지진 중 지진계에 감지되는 규모 2.0 이상의 지진은 2회로 나타났다. 규모 2.0 미만의 지진(미소지진)은 31회 발생했다.

구체적으로는 지난해 2월 10일 영광군(규모 2.2)과 지난해 4월 16일 고흥군(규모 2.6)에서 발생했다.

1999년부터 2021년까지 광주·전남에서 관측된 규모 2.0 이상 지진은 매년 평균 1.6차례였다.

지난해 한반도 전역에서 발생한 규모 2.0 이상의 지진은 77회로 전년(70.6회) 대비 10% 증가했다.

지난해 최대 규모 지진은 10월 29일 발생한 충북 괴산의 규모 4.1 지진이다. 이는 계기 관측(1999년) 이래 38번째로 큰 규모이며 2017년 포항에서 발생한 규모 5.4 지진 이후 가장 크다.

진동을 뚜렷이 느낄 수 있는 지진은 규모 3.0 이상이다. 전남에서 가장 큰 규모의 지진은 지난 2014년 12월 8일 고흥에서 감지된 규모 3.3이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71 광주일보 71년 호남 최대 부수·열독률 1위

결판 판매 중

이방인

이 기원수

문어당

문어당 | 15,000원

영광의 사나이! 이기원이 쓴 이방인

대한민국엔 0.1%의 이방인들이 살고 있다.
금수저로 불리는 불량 재벌과 무소불위의 권력을 쥔 국회의원 등의 고위 공직자들이다.

서민들의 삶의 애환을 보듬고 재벌과 권력자들을 질타한 작품!!

서점 판매 | 영풍문고 총장서림 초원문고
인터넷 판매 | 교보문고 영풍문고 예스24 알라딘 인터파크 (배송료 무료)